

일본의 '공자묘 대중화' 정책과 조선 내 공자묘 인식의 변화

- 총독부의 공자묘 개방정책과 그 영향을 중심으로 -

류 미 나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1. 머리말

일본의 근대 국민국가 형성에는 서양 제도의 수용과 더불어 유교, 불교, 신도의 교리를 이용한 제 정책들이 단행됐다. 필자는 그 중 유교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일본의 '국민통합'을 이루는 논리로 유교의 '충효'사상이 이용됐으며, 1890년에는 이 '충효'사상을 특화한 덕목이 메이지(明治)천황의 '교육칙어'로 반포됨으로써 '국민이 당연히 지녀야 할 도덕'으로 제도화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더욱이 일본의 유교 이용은 동시기 조선왕조에도 영향을 끼쳤고, 나아가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조선인의 '통합을 위한 도구로도 사용됐음을 밝혔다.¹⁾

주 제 어: 조선총독부, 공자묘개방, 대중화, 신분철폐, 유교보급
朝鮮總督府、孔子廟開放、大衆化、身分撤廢、儒敎の普及

그런데 식민지 조선에서의 유교 이용은 일본의 ‘국민통합’을 위한 유교 활용과 다른 방법이 동원됐다. 그 대표적인 것이 조선 내 ‘공자묘²⁾’의 개방이다.

일본은 이미 메이지 정부 수립 직후, 에도시대의 공자묘를 개방한 경험을 가졌다. 에도시대의 관학의 상징인 유시마세도(湯島聖堂)³⁾가 메이지정부에 의해 교육관청 및 대학들의 설립지로 변모하며, 일반 대중들의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조선의 ‘공자묘 개방’은 일본의 그것과 유사하다 하겠다.

그러나 일본의 ‘공자묘 개방’이 ‘국민통합’이란 목표로 단행된 것과 비교할 때, 조선의 그것은 일본의 경우와 매우 상이한 결과를 초래했다. 조선왕조시대 양반·유림의 전유물인 공자묘가 일반 대중의⁴⁾ ‘공공장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통합의 매개’로서가 아닌, 조선인 내부의 분열을 야기시키는 통로가 됐다. 이러한 결과는 총독부가 공자묘 개방에 부여한 정당성과 연결된다.

총독부는 공자묘 개방에 ‘유교 보급의 완성’과 ‘신분평등’이란 당위성을 부여했다. 이 당위성은 환언하자면, 조선의 전근대적 사회 질서의 파괴를 의미함과 동시에 식민지 통치로 인한 새로운 사회의 등장을 가리키는 것이다.

1) 줄고, 2010, 「19c말~20c초 일본제국주의의 유교 이용과 조선 지배」, 『동양사학연구』 제111집.

2) 공자묘는 공자의 위패를 모신 사당을 의미한다. 공자묘, 문묘, 성묘 등으로 불린다. 한국에서는 문묘라고도 하는데, 조선왕조시대에는 성균관에서 관장했다. 식민지기 조선에서는 문묘를 공자묘라고도 표현했는데, 본고에서는 식민지기의 사료적 용어로서 ‘공자묘’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일본의 ‘공자묘’에 대한 정책이 조선뿐만 아니라, 만주지역까지 확대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금후 연구 방향 전개의 편의상 ‘공자묘’로 호칭한다.

3) 유시마세도는 1690년 에도시대 제5대 쇼군 도쿠가와 쓰나요시(徳川綱吉)에 의해 설립됐다. 처음에는 에도시대 유학자로 유명한 하야시(林)가문의 사숙으로 이용됐으나, 1797년 에도시대의 관학기관으로 활용됐다.

4) 여기서 말하는 대중은 과거 조선왕조시대의 양반 및 유림 등과는 별개의 사회 구성원을 의미한다. 특히 공자묘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집단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것은 식민지기를 통해 근대를 경험하는 조선 사회의 굴절이 노정되는 것이었다.

필자가 총독부의 공자묘 개방 정책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에 의해서이다. 첫째, 식민지 권력이 ‘신분평등’이란 이름으로 조선왕조시대의 공자묘를 개방한 것의 역사적 의미를 검토하기 위해서이다. 그것은 전근대적 권위의 공간이 대중들의 ‘공공의 장소’로 변형됐을 때, 그 장소가 갖는 역사성과 사회성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총독부의 공자묘 개방 정책과 현재 한국사회에서 공자묘를 ‘한국의 정신을 대표하는 유교 문화의 상징’, 혹은 ‘한국의 전통 문화’⁵⁾로 내세우는 사회적 인식과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기 위해서이다.

선행연구 중 유교를 이용한 총독부의 지배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 중 이명화의 연구는 조선왕조시대의 성균관이 총독부에 의해 ‘경학원’⁶⁾으로 바뀌고, 1920년대까지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다루고 있어 높이 평가할 만하다.⁷⁾ 근래 정옥재의 연구 또한 주목할 만한 것으로, 경학원의 강사와 사성직 인물들의 활동과 그들이 남긴 ‘한시’를 통해 사상적 담론을 분석했다.⁸⁾ 그리고 박영미의 연구는 한국 병합을 전후로 한 조선의 관료와 일본의 유학자들 간의 교류를 밝히며, 이러한 인적 교류가 한국병합에 영향을 끼친 점을 지적했다.⁹⁾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종래 총독부의 유교정책을 ‘지배’와 ‘저항’의 측면에서 다뤄온 한계를 극복했고, 단순히 ‘항일 유림’의 틀을 벗어나, 식민지

5) 『韓國人(한국인)의 정신 연구·계승의 현장을 찾아 (4) 成均館(성균관) <上(상)>』, 『매일경제신문』 (1991. 1. 27).

6) 본고에서는 경학원을 ‘식민지기의 공자묘’로 칭함.

7) 이명화, 1993, 『조선총독부의 유교정책(1910~1920년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집.

8) 정옥재, 2007, 『1910~1920년대 경학원의 인적 구성과 역할-사성과 강사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106호를 참고.

9) 박영미, 2005, 『일제강점초기 한학 지식인의 문명관과 대일외식-친일적 경향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경학원에 보이는 근대 일본 유학의 경향』, 『일본학연구』 제27집.

지배 속에 유림들의 인식을 다각적으로 다룬 측면에서 평가할 만하다.

필자는 상기의 선행연구들의 업적을 발판으로 하되, 연구의 초점을 총독부의 정책 파악 뿐 아니라, 이 정책에 따라 조선사회 내 일반 대중이 식민지기의 유교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맞추고자 한다. 그중 공자묘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총독부의 지배정책과 어떻게 관계하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식민지기 조선의 공자묘를 중심으로 등장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공자묘의 대중화’란 틀에서 바라봄으로, 조선사회 대중들의 식민지에 대한 경험을 파악하고자 한다. 더불어 전근대시기 유교문화를 주도한 양반 및 유림들의 대 식민지 인식 또한 그려보고자 한다.

2. 지배정책으로서의 공자묘 ‘대중화’

1) ‘유교 보급’과 ‘신분 철폐’의 상징적 도구

조선총독부는 1911년 6월, 메이지천황의 하사금 25만원으로 조선왕조시대의 성균관에 ‘경학원’이란 사회교화기관을 설치해, 과거 성균관이 담당한 업무를 관장하게 했다. 그리고 동년 9월, 조선왕조시대의 성균관을 폐지했다. ‘유학을 강하고, 풍속덕화를 비보(裨補)한다’¹⁰⁾는 목적 아래 세워진 이 공자묘는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지방의 공자묘와 더불어 조선인 교화 활동을 해나갔다.

식민지기의 공자묘가 비록 조선왕조시대의 그것과는 달리, 교육기능이 소멸된 채 출발했지만,¹¹⁾ 석전의례는 여전히 중요한 업무로 남게 됐다.¹²⁾

10) 「경학원에 관한 규정」, 조선총독부령 제13호(1911. 6. 15).

11) 식민지기의 공자묘는 1911년 설치 직후에는 교육기능이 상실된 상태였지만, 1930년 4월, ‘명륜학원’이란 교육부설기관을 갖게 된다. 이 ‘명륜학원’은 해방을 맞이하여 성균관대학으로 바뀐다.

12) 공자묘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공자 및 성현에 대한 제사를 말한다.

그런데 총독부는 바로 이 석전의례 시 공자묘를 개방해 일반인들의 출입을 허가했다. 그것은 이 의례에 참석한 조선인에게 순회강연을 하기 위함이에요,¹³⁾ 그 순회강연을 통해 총독부의 정책을 장려하고, 순응하게 하기 위해서였다.¹⁴⁾

종래 조선왕조시대의 공자묘에는 일반인 출입이 엄격히 규제되어 왔다.¹⁵⁾ 중앙의 경우, 석전의례에는 국왕이나 왕자가 참석해 이를 관장했고,¹⁶⁾ 지방의 경우, 수령을 위시한 지역 양반 및 유생들이 의례를 담당했다. 그러한 공자묘가 비록 석전행사기간만이란 한시성은 있었지만 일반 대중들에게 개방된 것이다. 『매일신보』는 총독부의 공자묘 개편이 '메이지 천황의 은혜'라고 선전하는 한편, 이로 인해 '유교가 진흥될 것'이고, '경학의 광휘를 전국(全局) 내에 발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¹⁷⁾ 환언하자면 공자묘의 '대중화'인 셈이다.

총독부는 공자묘의 활동으로 '사람이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를 보존하고 지켜나가게 하며, 인심을 일깨워줄 것'이라 주장했는데,¹⁸⁾ 그 '도리'와 '깨달음'이란 바로 '국가', 즉 '일본에 대한 공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¹⁹⁾

그런데 총독부의 공자묘 개방은 조선왕조시대에 대한 철저한 비판을 전제로 했다. 총독부는 일반 대중에게 공자묘를 출입하며 직접 그 공간을 '경험'하게 하면서, 조선왕조시대에 이루지 못한 '신분의 평등'이 이뤄졌음을 선전했다. 그리고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한국을 병합하고 은사금 25

13) 경무총장·각도장관 앞 「經學院講士巡講に関する件」, 관통첩 제299호(1913. 9. 27).

14) 「조선총독부 훈령」, 제13호(1913. 3. 17).

15) 「태조실록」에는 석전제를 관찰사와 수령이 때에 따라 거행하도록 명하고 있다. 그 밖의 제사는 공경에서 하사까지 가묘를 세워 드리게 했고, 서인은 잡자는 곳에서 드리게 했다. 「태조실록」 2권(1392. 9. 24).

16) 석전의례의 주제는 주로 국왕에 의해 행해졌지만, 왕세자 등이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 「태종실록」 4권, (1402. 10. 15).

17) 「경학원 설립에 대하여」, 『매일신보』 (1911. 6. 18).

18) 「조선총독부 훈령」 제65호(1911. 8. 1).

19) 「조선총독부 훈령」 제13호(1913. 3. 17).

만엔을 내린 ‘메이지천황의 은덕’이라고 찬양했다.²⁰⁾

공자묘가 개방됨으로 ‘유교가 진흥할 것’이란 청사진과 ‘메이지천황에 대한 은덕의 찬양’은 유럽뿐 아니라 일반 대중을 향해서도 적극적으로 이뤄졌다. 그 중 1917년 5월, 대구에서 열린 공자묘 주최 강연회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 대구 고등보통학교의 교장으로 재임 중인 다카하시 도루(高橋亨)²¹⁾는 이 강연회에서 공자묘의 개방이 조선왕조시대의 ‘신분제’를 ‘구별 없이’ 만든 일이라고 평가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조선에는 노불(老佛)의 해는 없었지만 과거와 반상(班常)의 구별이 있기 때문에 유교가 서민 전부를 교화하지 못했습니다. (중략) 유학이 성하여 각 군에 향교가 관설(官設)되었는데, 향교²²⁾는 지방공화의 근원이라. 여기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성현을 직접 만나고 공경하는 것 같게 되어, 유교 교화의 감동함이 매우 깊고 중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출입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조금도 관계가 없고 도리어 향교가 있기 때문에 유교를 받드는 인민과 받들지 못하는 인민을 구별하는 것 같아서 유교는 선비들의 사유 전유물이 된 모양이 됐고, 상민(常民) 이하는 경서를 읽지 아니하고 유도를 따르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이조(李朝)가 오백년 간 순수하게 유교를 받들면서 아직도 서민이 그 교화를 입지 못한 것은 이와 같은 까닭입니다. (중략) 지방은 각처에서 반상(班常)은 물론하고 자제를 학교에 보내고 또한 향교 제사에는 각 학교 생도가 다 참배할 수 있게 허가된 고로, 즉, 유교는 점점 반상 구별 없이 일반 소년에게 보급하여 학교 교육상으로 보면, 현금 제도는 도리어 구시대(조선왕조시대-필자)보다 유교 교양의 서민적 발전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²³⁾

20) 「경학원과 하사금」, 『매일신보』 (1911. 8. 4).

21) 다카하시는 1908년부터 조선에 건너와 관립한성고등학교의 교유를 역임하고, 대구 고등보통학교의 교장으로 재임했으며, 후에 경성제국대학의 교수로 임명된 인물이다.

22) 식민지기 조선에서는 향교와 문묘의 역할을 향교에서 담당했다. 향교직원을 선출하고 문묘제사의 일을 관장하게 했다. 본고에서는 지방의 향교, 역시 공자묘로 칭한다.

23) 高橋亨, 1917, 「儒教の庶民的發展」, 『경학원잡지』 제15호, 72~73쪽.

본래 조선 유교와 불교 연구자로도 저명한 다카하시의 이 글은 총독부의 ‘공자묘 개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조선왕조시대의 ‘반상 차별’이 결국은 유교를 양반과 유림들의 전유물로 만들었고, 일반에게는 보급되지 못하게 한 주범이란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를 지닌 공자묘는 그 존재만으로도 조선인 내부를 구분하는 ‘차별의 상징’이 된다는 것이다. ‘공자묘’란 그곳에 출입하는 자에게는 ‘유교의 감동이 매우 깊고 중’할지 모르지만, 그곳을 출입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의 주장은 ‘식민지 지배=신분 철폐’란 총독부의 슬로건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말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공자묘에 출입하지 않은 사람들, 즉 일반 대중들과 공자묘가 관계없다’는 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서를 읽지 않고 유도를 따르지 못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 한다’는 말이다. 물론 공자묘 출입이 경서 독서 및 유도 존중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 다카하시는 양반 및 유림들의 공자묘 출입 그 자체가 일반 대중들 눈에는 별개의 신분을 상징하는 ‘사회적 지위의 표상’²⁴⁾으로 각인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공자묘 출입이 대중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본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총독부의 공자묘 개방은 조선왕조시대에는 접할 수 없었던 그 권위를 대중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한 ‘신분의 평등화’요, 그런 기회를 준 메이지천황의 은덕인 것이다.²⁵⁾

실제 공자묘의 개방으로 대중들의 공자묘 방문이 대폭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그들은 그동안 ‘상상만 했던 공자묘’를 실물로 직접 확인했고,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특히 조선왕조시대라면 절대 출입할 수 없던 석전의례는 대중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은 ‘볼거리’로, 늘 많은 인파로 들썩였다. 예를 들어 경성의 공자묘에서 1911년부터 18년까지 봄과 가을로 매년 2회씩 거행된 석전의례를 보면, 매회 평균 900명이 넘는 ‘관객’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

24) 이 용어는 박환무선생의 조언에 기인한다. 박환무선생은 총독부가 조선왕조시대의 권위를 무조건 쇠퇴시킨 것이 아니라, 그 권위에 힘입어 식민지권력의 강대함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25) 「경학원과 하사금」, 『매일신보』(1911. 8. 5).

난다. 지방의 공자묘에서 중앙의 공자묘 및 총독부에 보고한 기록에 따르면, 봄과 가을의 석전 참가자수는 다음과 같다. 1911년 700명, 1912년에는 400명과 180명, 1913년에는 380명과 300명, 1914년에는 870명과 890명, 1915년에는 640명과 530명, 1916년에는 1170명과 760명, 1917년에는 1700명과 2200명, 1918년에는 1380명과 2420명이다.²⁶⁾ 그 중에는 유림을 비롯해 총독부의 관리들, 일본인 유지들, 그리고 남·여학생들도 있었다. 앞서 다카하시가 말한 ‘유교의 보급’이란 바로 이러한 현상을 지칭한 말이다.²⁷⁾ 그리고 총독부는 공자묘 개방을 통해 조선왕조의 비판과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다.²⁸⁾

그렇다면 그러한 공자묘 개방이 향촌 질서 속에서 어떻게 이뤄졌고, 그것은 총독부의 식민지 정책에서 어떠한 위치였는지를 살펴보자.

2) 공자묘 개방으로 본 향촌사회의 변화

총독부의 공자묘 개방 정책은 지방의 공자묘에서도 동일하게 이뤄졌다. 지방의 공자묘에도 석전 의례에 일반 대중들이 참가했고, 20년대 중반부터는 석전의례 이외에도 공자묘 내에 ‘충효교실’, ‘예절교실’, 그리고 ‘백일장’, ‘시조대회’ 등 각종 사설 강습회와 특별 행사가 거행됐다.²⁹⁾

공자묘 개방에 대한 조선인 개개인의 인식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지방의 공자묘가 경성의 공자묘와 적극적인 연계를 꾀했고, 지방의 공자묘가 그곳에 출입하는 인물들 및 지역사회의 동향을 경성에 보고한 것만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지방의 공자묘는 석전의례 및 특별 행사를 거행

26) 이상은 『경학원잡지』 제1호에서 제19호에 기재된 보고서에 기인한 것이다. 비록 보고서의 신뢰성에 이 수치는 달라질 수 있지만, 경학원이 굳이 총독부에 과장된 보고를 할 이유는 현재 찾을 수 없다.

27) 高橋亭, 앞의 글.

28) 성낙현, 1913, 『儒教宗旨』, 『경학원잡지』 제1호, 88쪽.

29) 이러한 기록은 식민지기 공자묘인 경학원 기관지 『경학원잡지』에 실려 있다. 지방의 공자묘에 대해서는 지방에서 올라온 「지방보고」를 토대로 정리되어 있다.

할 경우, 해당 지방관청과 경성의 공자묘에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1910년대에는 전체 공자묘 중 34%가 이 의무를 수행했고, 1930년대 중반에는 80%까지 의무 수행 수치가 증가됐다.³⁰⁾

물론 이러한 수치로 총독부의 유교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총독부의 비호를 받은 경성의 공자묘가 형식적으로나마 지방 공자묘의 상부기관에 위치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렇듯 변형된 공자묘에 유림들이 출석했다는 사실이다. 다음 소개할 충청도 지역의 유림인 S씨의 일기는 바로 이러한 식민지기의 공자묘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S씨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1905년에 출생해서 1976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유발(遺髮)을 고집한 철저한 유학자였다. 그는 거의 매일 일기를 작성했는데, 그가 남긴 일기 중 1924년 1월 1일부터 1975년 12월 30일까지 약 50년간의 내용이 가족들에 의해 간행됐다. 간행된 내용이 50년간의 일기 모두를 포함한 것은 아니지만, 식민지기와 해방 후의 조선사회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엔 틀림이 없다.

그런데 그가 남긴 일기에 바로 석전의례에 참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1924년 2월, 문(義) 공자묘에 부친과 동행해 석전의례를 마친 그는 공자묘 현실의 안타까움을 일기에 적었다. 과거의 공자묘 의례는 '선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일본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더욱이 공자묘 운영권이 변했다는 내용의 이 글은 그가 공자묘 현실에 얼마나 큰 실망을 하고 있는지 잘 나타나 있다.

오늘은 문(義)향교에서 제사지내는 날이다. 부주(父主)를 모시고 참석하고 저녁 때 돌아오다. 부주께서 시를 몇 편 외우신 뒤에 우연히 탄식하여 말씀하시되 슬프도다. 오늘 향교 향제는 선비의 일 중에 한 가지라. 지금 그렇지

30) 『경학원잡지』에 제출된 '지방보고란'에는 지방 공자묘의 보고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910년대 지방의 공자묘 중 보고서 제출이 가장 활발한 지역은 경상남도이고, 1930년대에는 충청북도의 보고 활동이 가장 활발했다. 이에 대한 연구는 졸고, 2005, 「식민지권력예의 <협력>과 좌절」, 『한국문화』 36집을 참고.

못한 까닭은 무엇인가? 향교의 위토(位土)³¹⁾나 제반사를 왜놈들이 다 빼앗아 제멋대로 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³²⁾

일기 속에서 S씨가 한탄한 것은 지방의 공자묘가 일본에 의해 운영된 것과 공자묘 내 재산 역시 식민지 권력에 의해 소유권이 모호해지거나 지출의 제재를 지적한 것이다. 실제 이 시기 총독부는 조선인의 교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향교재산’을 무료로 빌려 주었지만, 이 역시도 부윤 군수, 도사의 관리 하에 두어, 재산의 매각이나 그 외 양여(讓與), 교화의 내용 등은 반드시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행할 수 있도록 했다.³³⁾ 더욱이 S씨의 활동지역인 문의의 경우, 총독부의 행정구역개편으로 말미암아 타 지역과의 통폐합이 이뤄진 곳으로 토지소유 및 그 사용에 혼란이 가중돼 공자묘 내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³⁴⁾

뿐만 아니라 이 시기 타 지역에서도 S씨가 지적한 ‘위토’, 즉 문중의 공동재산적인 토지문제가 심각했다. 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으로 공동재산이 개인소유로 명의가 변경되었고, 이로 인한 소유권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의 일기 속에 나타난 ‘제반사를 왜놈들이 다 빼앗아 제멋대로 하고 있다’는 내용은 바로 이러한 향촌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담고 있다. 예를 들어 S씨

31) 위토란 제사에 관련된 업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공동재산적인 토지를 말한다. 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으로 이러한 토지들은 개인적 명의로 이전됐다. 개인적 명의 변경으로 인해 토지 매매가 이뤄지는 일이 발생해 공동재산의 성격이 흐려졌다. 또한 이러한 개인적 매매로 인해 상호 소송을 거는 일도 생겼다.

32) 『S씨의 일기』(1924. 2. 4). S씨에 대한 실명은 S씨의 후손과 협의된 사항이 아니므로, 본고에서는 거론하지 않기로 한다. S씨 일기에 대한 인용은 줄고, 2010,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정책과 유교-총독부의 경학원 운영과 조선인 교화-』, 『일본학』 31집을 참고.

33) 「향교재산관리규칙」, 조선총독부령 제91호(1920. 6. 29).

34) 지역 내 공자묘는 1군 당 1개의 공자묘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통폐합이 된 지역의 경우, 2개의 공자묘 중 1개의 공자묘의 재산이나 인적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군이 통폐합 되어도 공자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예도 적지 않았다.

의 일기와 동시대인 1924년 3월, 전북 고창에서는 과거 향교재산을 교묘하게 매각한 사실을 성토했으며, 그 진위를 밝히는 '유림대회'를 열었고 이 문제로 고창 유림의 분규를 가져온 기사가 나기도 했다.³⁵⁾

그러나 필자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S씨 부자가 공자묘를 출입하듯 공자묘는 여전히 공자를 제사하는 유일한 장소였고, 유림들 또한 그 제사를 거행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해 가는 장소로 기능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그 중에는 이런 총독부의 유교정책에 반발하듯 공자묘를 개인적으로 설립한 사례도 있다. 1923년 7월 30일 『동아일보』에 실린 유생 정은채(鄭殷采)의 경우가 그러하다.

경성 시내 서사헌정(西四軒町) 48번지에 거주한 유생 정은채는 평소 공자를 존경하는 마음이 남달라 개인적으로 공자묘와 비각을 세우려 했다. 그러나 총독부 당국이 이를 저지했다. 이 신문 기사는 정은채가 공부자를 연구하는 학자로 오륜행실을 출판할 정도로 공자 숭상에 열심이었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이미 고양군(高陽郡) 한지면(漢芝面)에 묘각 설립을 시도하다가 당국으로부터 금지당한 경력도 보도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총독부 당국은 “그의 뜻은 이해하지만, 공부자에 관한 일은 전부 경학원(공자묘-필자)에서 맡아 하는 일이므로 개인에게 그 같은 일을 시킬 수 없다”는 명령을 시달했다.³⁶⁾

상기의 사례는 두 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첫째, 총독부는 유교관계의 업무를 공식적으로 인가한 경성 및 지방의 공자묘 외에 그 어떤 공자묘 시설도 허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살펴 본 총독부의 '유교보급' 슬로건과 모순되는 것이다.

총독부가 '유교보급'을 위해 공자묘를 개방하고 일반 대중에게 공자묘를 경험하게 했다면, 개인적 공자묘 설치 또한 '유교 보급' 차원에서 당연히 이뤄져야 할 일일 것이다. 그러나 총독부는 경성과 지방의 공자묘 이외에는

35) 「고창유림대회」, 『동아일보』 (1924. 3.18).

36) 「孔子廟의 私設은 절대로 허가하지 않는다」, 『동아일보』 (1925. 7. 30).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즉, 총독부의 공자묘 운영은 식민지 정책으로서의 수행 목적으로, 공자묘에 대한 획일적 사유를 강요한 것이었다.

둘째, 정은채의 ‘공자묘 설립 사건’으로도 알 수 있듯이, 이 시기에 개인적으로도 공자묘를 건립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공자묘를 개인적으로 소유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개인이 공자묘를 건립했다는 것은 총독부의 ‘공자묘 대중화’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으며,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물론 정은채의 사례는 총독부의 공자묘 개방에 대한 반발로 ‘관제의 공자묘’를 부정하고, 고의적으로 공자묘를 세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총독부의 공자묘가 표면적으로는 조선왕조시대의 공자묘를 계승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정통성을 둘러싼 긴장관계 속에 있음을 알 수 있다.³⁷⁾

이렇듯 식민지기 공자묘는 총독부의 조선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방됐고, 그것은 조선왕조시대 ‘신분으로 막혀 있던 유교를 보급했다’는 선전의 도구가 됐다. 그러나 정작 총독부의 공자묘 운영은 철저한 관리와 감시 하에 이뤄졌고, 획일적 공자묘 이미지를 생산하는 데 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런 목적으로 개방된 공자묘에 대해 일반 대중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을까. 다카하시가 말한 것처럼 식민지 지배로 인해 ‘유교의 보급’이 완성됐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고 대중들은 그런 공자묘를 어떻게 바라봤으며, 어떻게 접촉했는지 알아보고, 식민지기 조선의 대중들이 인식한 공자묘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3. 공자묘에 대한 대중 인식의 다양성

식민지기 조선의 공자묘가 대중들 사이에 어떻게 인식됐는지는 당시의

37) 이러한 해석은 해방 후 식민지기의 공자묘(경학원)가 ‘성균관’으로 복칭되어 현재까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정통성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신문이나 잡지, 그리고 소설 등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대한 제국기부터 이미 '향교재산'은 그 용도가 변경되어, 그 재산이 보통학교의 교육비로 충당되거나 공자묘 내 부지에 학교가 건립되기도 했다.³⁸⁾ 그러나 공자묘만큼은 여전히 일반 대중들의 출입이 금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총독부의 공자묘 개방은 대중들의 공자묘 인식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겠다.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총독부의 공자묘 개방으로 공자묘를 찾는 인파가 많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중들의 공자묘 인식이 과거 조선왕조시대부터 공자묘를 출입해 온 양반 및 유림들의 그것과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그러한 시각은 과도한 생각이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기의 공자묘를 둘러싼 각종 범죄들의 사례는 이 시기 조선인과 공자묘의 관계를 재고하게 만드는 것들이다. 예를 들면, 1925년 12월 19일 『동아일보』는 전북 순창군(淳昌郡)에서 발생한 '공자묘 파괴 사건'을 전하고 있다.³⁹⁾ 동년 12월 14일, 순창군 향교에서는 공자의 위패가 놓인 공자묘 뒷담이 파괴됐다. 비록 내부 물건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 사건은 일단락 지어졌지만, 조선왕조시대와 비교해 '공자묘를 파괴 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1935년 2월 27일자 『동아일보』에는 함흥부 반룡산록 공자묘에 괴한이 침입해 제기를 훔쳐 달아난 기사가 실렸다.⁴⁰⁾ 시가 300원 가량의 진주 제기가 도난당했는데, 경찰은 결국 진범 3명을 소탕하고 마무리됐다.⁴¹⁾ 이러한 공자묘 파괴와 공자묘를 둘러싼 범죄 사건은 식민지기를 통해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이상의 사건들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그것은 공자묘 파괴나 제기 절

38) 「학부훈령 제3호」(1910. 4. 28)

39) 「淳昌郡의 孔子廟를 破壞」, 『동아일보』(1925. 12. 19).

40) 「孔子廟에 侵入 神器를 盜去(咸興)」, 『동아일보』(1935. 2. 27).

41) 범인들에 대한 재판기록은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 그 기록들은 조선왕조시대 공자묘에 행한 타 범죄와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며, 그것으로 식민지기 공자묘에 대한 평가가 더욱 분명해지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도 행위가 단순한 기물 파손의 문제를 넘어, 공자묘가 지닌 ‘신성성’의 파괴요, ‘전근대적 사회 인식의 변화’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자묘가 조선왕조시대의 국가 이념인 유교의 상징이고, 오랫동안 조선 사회 질서를 유지시킨 이데올로기의 표상임을 상기할 때, 공자묘 파괴나 도난 등은 전근대시기 공자묘에서 배제된 대중들이 근대기, 정확히 말하자면, 식민지기 지배정책에 의해 공자묘를 출입하게 됐지만, 결국 공자묘 그 자체에 대한 의미를 체현하지 못한 현실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중들의 공자묘 활용 방식은 식민지기 소설에서도 볼 수 있다. 1926년 ‘선동자’란 제목의 소설에서 공자묘는 학생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교사 폭행의 장소로 등장한다. 학교 당국의 부조리에 대항하는 교사 ‘리 선생’이 주인공인 이 소설에는 ‘리 선생’을 퇴출시키기 위해 학교가 학생들을 선동하고, ‘리 선생’에게 누명을 씌운 내용을 신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리’에 대해 오해하고 그를 공자묘로 불러내어 집단 폭행을 가하려 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네, 저 공자묘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 몇 사람이 모였는데 리 선생님을 좀 청하다가 듣고자 하는 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리는 다 알아 들었다. 그리고 반드시 무슨 일이 나리라고 생각을 했다. 공자묘 하면 인가와 떨어진 산 속에 있는 곳이다. 그리고 지금은 어두워 가는 저녁이다.⁴²⁾

위의 인용문은 ‘리 선생’이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에 끌려가기 직전의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공자묘의 설명은 ‘인가와 떨어진 산 속’, 환원하자면 ‘인적이 드문 곳’으로 그려져 있다. ‘리 선생’은 결국 공자묘로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하는데, 조선왕조시대 지역 내 수령이 참석한 ‘제사의 장’이 폭행의 장소로 둔갑한 것이다. 조선왕조시대를 거쳐 예를 존중하며 사제 간의 예 또한 중요한 덕목으로 숭상된 점과 그 예를 가르친 곳이 바로 공자묘인 것을 생각할 때, 소설 속에 나타난 공자묘는 대중들이 찾는 장소로 ‘보급’

42) 宋影, 1926, 「煽動者」, 『개벽』 제66호.

됐을지는 모르지만 그 성격은 '유교적 소양'과 거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놀라운 것은 급기야 공자묘가 '귀신'이 나타나는 '괴담의 장소'로도 등장한다는 것이다.

1934년 6월 1일 『삼천리』에는 공자묘에 대한 괴담이 실렸다.

공자묘 안에 설립된 농업학교는 과거 선비들이 공부하던 강실(講室)을 개조해 만든 것으로 공자에 대한 제사를 위해 사용하던 제기 보관소를 양잠실로 이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양잠실에 밤마다 흰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난다. 학생들 중 그 흰 옷 입은 사람을 본 학생 하나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말을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며칠 동안 누워서 앓다가 결국 학교를 그만뒀는데, 학우들과 이별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다에 몸을 던져 자살했다는 이야기이다.⁴³⁾

이 이야기 속에는 조선왕조시대의 공자묘와 비교할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들이 담겨져 있다. 먼저 식민지기의 공자묘가 농업학교로 변경된 것과 제기를 보관하던 곳이 양잠실로 활용된 점이다.

고종 시대를 보더라도 공자묘의 제기는 국왕 스스로 그 보관 절차를 교지하며 공자묘 제사의 신성성을 알리는 물건이었다. 예를 들어 고종은 “예의를 숭상하고 풍속을 돈독히 하며 명분과 절개를 장려하고 실용에 힘쓰도록” 했고,⁴⁴⁾ “문묘(文廟) 제사 예식을 배로 엄숙하고 공경스럽게 하라”⁴⁵⁾고 명령할 만큼 공자묘 예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불과 30여 년이 지난 1930년대에는 공자묘의 제기 보관실이 양잠실로 이용되고, 귀신도 등장하는 괴담의 장소로 바뀐 것이다.

공자묘가 괴담의 무대로 등장한 것은 사교(邪教)를 지양해 온 조선왕조시대의 사회상을 상기할 때, 매우 흥미롭다. 물론 조선왕조시기에 불교와 샤머니즘 등이 사대부에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성행했다고 하지만, 유교를 국가이념으로 내세운 조선왕조 사회에서 공자묘와 '귀신'은 동일하게 존재하기

43) 白浪星, 1934, 「養蠶室의 怪變」, 『삼천리』 제6권, 제7호.

44) 『고종실록』 제9권(1872. 2. 1).

45) 『고종실록』 제39권(1899. 4. 27).

어려웠다. 그런데 식민지기 공자묘에 ‘귀신’이 등장한 것은 대중들에게 개방된 공자묘가 ‘유교의 존숭’이나 ‘유교 이념의 중심’으로 숭배되기보다는 단순히 ‘선비들의 장소’, 혹은 ‘공자 맹자를 읽었던 곳’이란 막연함 속에 이미지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 스스로 공자묘를 ‘구름같이 모여든 선비들이 공자 맹자를 읽었던 곳’으로 표현한 것에서도 공자묘에 대한 ‘불명확한 이미지’를 읽을 수 있다.

또한 채만식의 소설 『태평천하』⁴⁶⁾에서도 주인공 ‘윤직원’의 공자묘 출입이 총독부 정책과 연동된 공자묘의 변화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윤두섭’은 ‘윤두꺼비’로 불리는 인물로 돈을 좋아하는 극히 ‘속물적인 인간’으로 묘사되고 있다. ‘윤두섭’은 ‘향교직원’에 부임되면서 ‘윤직원’이란 호칭으로 불리는데,⁴⁷⁾ ‘윤직원’은 정작 공자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소설 『태평천하』는 그가 어떻게 ‘윤두꺼비’에서 ‘윤직원’이 됐는지, 그리고 그가 공자묘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시골은 향교(공자묘·필자)라는 게 있어서, 공자님 맹자님을 비롯하여 옛날 상국(上國)의 여러 성현을 모시는 공청이 있습니다. (중략) 이 향교의 맨 우두머리 가는 어른을 직원(直員)이라고 합니다. 직원을 옛날에는, 그 곁에서 학문과 덕망이 높은 선비가 여러 사람의 촉망으로 뽑혀서 지내곤 했는데, 근년 향교의 재정이며 모든 범백을 군청에서 맡아 보게 된 뒤로부터는, 전과는 기맥이 좀 달라졌는지, 장의(掌儀)라고, 바로 직원의 아랫길 가는 역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사음이며 농토 같은 것을 줄 수 있는 다액 납세자(多額納稅者)라면 직원 하나쯤 수월한 모양입니다.

윤두꺼비로서야 과거를 보아 벼슬을 해서 양반이 되겠습니까? 능참봉을

46) 채만식, 1938, 『태평천하』.

47) 총독부는 1911년 11월 1일부로 본래 ‘향교직원’의 명칭을 ‘문묘직원’으로 교체했다. 이것은 경성의 경학원과 동일하게 과거 조선왕조시대의 향교가 지닌 교육기능보다 공자 및 성현에 대한 제사 기능만을 존속시킨다는 의미에서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식민지기 조선에서는 상기의 두 가지 호칭을 혼재해 사용했다. 「조선총독부령」 제127호(1911. 10. 28).

하겠습니까? 아신 대로 향교의 직원이 만만했겠지요.

그래 그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윤두섭이란 석 자 위에 무어나 직 함이 붙기를 자타가 갈망하던 끝이라 윤두꺼비는 넘죽 뛰어 윤직원 영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뒤로 삼년 동안 윤두꺼비(-가 아니라-) 윤직원 영감은 직원으로 지내면서, 춘추 두 차례 씩 향교에 올라가,

“흥-”

“바이-”

소리에 맞추어, 누가 기운이 더 세었는지 모르는 공자님과 맹자님을 비롯하여, 여러 성현께 절을 하는 양반이요, 선비 노릇을 착실히 했습니다.

공자님과 맹자님이 누가 기운이 더 세었는지 모르겠다는 말은, 윤직원 영감이 창조해 낸 억만고의 수수께끼랍니다.⁴⁸⁾

다시 말해 ‘윤직원’에게 공자묘는 사회적 지위를 높여줄 수단에 불과할 뿐, ‘공맹의 도’를 실현하기 위해 일하는 장소가 아니었다. 그러한 ‘윤직원’이 공자묘를 출입할 뿐 아니라, ‘직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소설 속에서도 설명하듯, “향교의 재정이며 모든 범백을 군청에서 맡아 보게 되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앞서 소개한 S씨의 일기와도 일맥상통하는데, S씨가 ‘향교 향제가 선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향교의 위토나 제반사를 왜놈들이 다 빼앗았다’⁴⁹⁾고 한탄한 것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총독부에 의해 공자묘가 개방돼 이른바 ‘대중화’가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대중들의 공자묘를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으며, 양자 간의 ‘거리’는 공자묘를 둘러싼 유럽과 일반 대중들 간의 분열로 분출됐다.

48) 채만식, 1938, 『태평천하』.

49) 『S씨의 일기』, 앞의 글.

4. 공자묘의 ‘근대화’와 ‘대중화’와의 상극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본에 의해 개방된 공자묘에는 일반 대중들의 출입이 가능했지만, 그것이 곧 대중들의 공자묘에 대한 이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공자묘와 대중 사이에는 ‘일본제국주의의 조선 지배’란 특수 조건이 잠재해 있었고, 양자 간의 ‘갑작스러운 만남’은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없었다. 전근대를 지나 ‘근대’에서 조우한 공자와 대중 사이에는 ‘식민지성’이 배태된 한계를 갖게 됐으며, 그러한 ‘한계성’은 양자가 대립관계에 섰을 때, 각종 ‘충돌’과 ‘분열’을 유발할 수 있는 ‘촉매제’로써 작용했다.

이 절에서는 식민지기 조선에서 공자묘를 둘러싸고 일어난 ‘충돌’과 ‘분열’의 사례를 통해 조선사회에 공자묘가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를 재고해 보고자 한다.

1920년대의 신문에는 식민지기 공자묘를 둘러싼 ‘충돌’의 모습이 종종 소개된다. 예를 들어 앞서 S씨가 언급한 ‘위토’의 경영권 문제나 공자묘 시설 이용에 관한 근대 지식인들과의 충돌이 그것이다. 이들 충돌의 대부분은 조선인 간에 발생했고, 심각성에 따라서는 총독부 권력의 개입으로 겨우 진정되기도 했다. 바로 1922년 7월 11일, 『동아일보』에 보도된 진주의 공자묘는 상기의 충돌이 잘 나타난 사건이라 하겠다.

진주 지역의 청년들은 야학교를 운영하던 중, 학생의 증가로 교실이 비좁아지자 새로운 야학교 장소를 물색했다. 그 중 눈에 띈 것이 진주의 공자묘였다. 과거 향교로 사용하던 공간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청년들은 진주군수의 알선으로 공자묘의 장의와 직원의 허가까지 받아 이곳을 이용하려고 했다. 그런데 청년들이 수리비 1,400원의 예산을 들여 당국의 인가 신청까지 할 때 즈음, 갑자기 유림들이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야학교 설치에 반대한 유림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신교육을 공자묘정에서 실시하는 것이 공자의 성령(聖靈)을 불안케 함이

요, 신교육과 공자묘와는 서로 용납할 수 없다.⁵⁰⁾

유림들은 야학 반대를 천명한 후, 종래 비어있던 공자묘에 돌연 한문학자를 초빙하고 '한문강습소'를 설치했다. 그리고 청년들을 저지하기 위해 '유림대회'를 열어 결속을 다졌다. 청년들은 유림들과 수차례 접촉을 통해 '한문강습의 필요 없음'과 그 강습 자체도 '유림 자제에만 강습하는 뜻'을 추궁하며, '시대의 변천과 우리 민족의 처지'를 들어 유림들이 반성하길 요구했지만, 유림들은 묵묵부답이었다. 청년들은 급기야 공자묘에 야학교 기물을 들고 '침입'해, 야학교 간판까지 달았고, 유림들은 이를 군수에 보고했다. 군수의 저지로 청년들은 학교 간판을 떼고 학생들을 데리고 돌아갔는데, 이후 군수가 유림들의 강습회 설립까지만 한시적으로 야학교의 수업을 허가했다.⁵¹⁾

이 사건은 과거 공자묘를 전유한 유림집단과 근대적 사회 질서 변화로 탄생한 지식인 집단의 충돌이란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유림들은 공자묘에서의 신교육 실시가 '공자님의 성령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는가 하면, 청년들은 '한문강습이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청년들은 교육의 대상을 '유림 자제에게만' 한정시키는 것을 '시대의 변천과 우리 민족의 처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상기에서 보이는 양자의 갈등은 단순한 장소 이용의 문제로 볼 수 없다. 양자의 대립에는 종래 공자묘를 전유해 온 전근대적 가치와 이를 밀어내는 '근대성'의 마찰이 뒤얽혀있다. 특히 젊은이들이 '한문강습의 불필요'와 '유림 자제에만 강습'하는 것을 비판한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공자묘가 대중들의 것이 아닌, '양반 자제'에게나 허용된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음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50) 「教育을 反對하는 儒林, 진주향교안에 강습소를 함은 공자의 영혼은 불안케 함이다」, 『동아일보』 (1922. 7. 11).

51) 「青年과 儒林의 衝突 진주향교에 강습소 이전 문제. 도청의 간섭으로 위선해결」, 『동아일보』 (1922. 7. 22). 이 인용문은 즐고, 2005, 「식민지권력예의 <협력>과 좌절」에서도 소개한 바 있다.

실제 동년 다른 글에서도 당시 공자묘가 양반이나 유림들을 위한 장소로서 이해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22년 7월 10일 잡지 『개벽』에는 공자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이 실려 있다.

유교 풍화(風化)의 수선지(首先地)되는 경학원(식민지기 공자묘-필자) 또는 각 군 향교의 직원들은 매년 춘추 석(釋), 매월 삭전(朔奠)의 예와 망알성(望謁聖)의 의(儀)를 펼친 뒤에는 반듯이 술을 패(佩)하고 지(紙)를 후(拂)하여 명소 승구(名所勝區)에 시회(詩會)를 개(開)하고 화조풍월(花鳥風月)을 음롱(吟弄)함으로써 무상한 쾌락을 삼는 이가 없지 아닌 줄 압니다.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한번 뒤지면 천참 만갱(天塹萬坑)의 구렁에 빠지는 이 때가 아닙니까! 더군다나 금일 처지에 있는 우리 조선민족으로서 이러한 부패한 노릇을 일삼을 때가 아닌 것은 제현(諸賢)도 아마 아실 듯 합니다.⁵²⁾

이 논설에서도 공자묘는 여전히 ‘특정 인물들의 활동지’, 그리고 ‘전근대적 장소’로 지적됐다. 저자에게 있어 공자묘의 유림들은 ‘시회를 열어 화조풍월을 음롱’하는 ‘무상한 쾌락’의 소유자들이다. 또한 조선민족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부패한 노릇을 일삼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패한 노릇’이 자행되는 공자묘는 ‘타파해야 할 구습’의 대상이 되어 갔다. 바로 공자묘를 ‘중국 외래문화’로 규정하는 인식의 확대이다.

1926년 철학자 백성옥⁵³⁾의 글에는 ‘공자묘를 숭상하는 것’이 ‘민족적 신성을 파괴하는 것’과 동일시되어 있다.

어떠한 민족을 물론하고 문화민족이라면 자존심을 가지나니 자존심이란 것은 그들의 역사상에 나타난 위대한 인격을 숭앙하는 중에서 생기는 기물

52) 金秉濬, 1922, 「(논설)儒林諸賢에게 一言을 告합니다.」, 『개벽』 25호.

53) 백성옥은 1924년,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에서 동양철학 박사학위를 받은 인물로, 1925년 9월, 조선에 돌아와 주로 조선인의 정체성 자각을 주장한 글을 발표했다. 불교에 몸담고 있던 그는 조선 사회의 공자묘를 ‘외래문화의 산물’로 규정했다. 백성옥은 해방 이후 이승만대통령 정권에서 내무부 장관을 역임하고, 1953년 동국대학교 총장에 임명됐다.

(奇物)이 아니라. (중략) 그들의(한인漢人의) 역사적 위인을 찬미하는 것인즉 실로 당송(唐宋) 문화의 중추(中軸)라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을 본 주신 민족은 그들의 역사적 위인에 대한 이해가 적은 반면에서 한인의 역사적 위인을 찬미하고자 하였다. 이것을 하고자 성히 자기들에게 선전하고 동시에 보수성이 강한 농민에게 보급하고 터무니도 없는 지명과 산명을 만들어서 주신 민족적 신성을 파괴하는 동시에 한족적(漢族的) 위인숭배가 외래물 아닌 것과 같이 만들었나니 예하면 황해도의 수양산(首陽山), 평양 및 평양의 기자릉(箕子陵)으로 시작해 전부를 개정하고 그것도 부족하여서는 국도(國都)를 시작하여 방랑곡곡이 관왕묘(關王廟), 공자묘(孔子廟) 등을 두었다. 물론 이 통에 주신 민족적 위인 숭배물은 많이 파괴의 운명으로 종(終)을 고하였을 것은 무엇보다 명백하니라.⁵⁴⁾

요컨대 백성욱은 공자묘를 일개 ‘외래물’이요, ‘중국의 문화’로 규정한 것이다. 더욱이 조선 각지에 설치해 온 공자묘를 비롯, 관왕묘, 기자릉 등이 ‘민족적 위인 숭배물’을 파괴하는 요인이라고 비판한다. 그가 무엇을 갖고 ‘민족적 위인 숭배물’이라 지칭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백성욱이 공자묘를 ‘조선 민족의 문화’와 대립되는 장소로 인식했고, ‘외래물’로 생각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조선왕조시대에는 과거에 합격하면 ‘문선왕을 만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며, 공자묘 배알을 국가 의례의 기준으로 삼은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이다.⁵⁵⁾

또한 석전의례는 조선왕조시대의 ‘상전(常典)’이었고,⁵⁶⁾ 공자묘가 중국의 예를 따라 관리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긴 것과는 큰 거리가 있다.⁵⁷⁾ 조

54) 백성욱, 1926, 「나란 무엇인가」, 『동광』 제2호.

55) 『태종실록』 20권, (1410. 10. 29)기사에는 과거에 합격한 선비들의 예법으로 “상관(上官)하는 날에 본조(本朝)의 제도에 의하여 먼저 문선왕(文宣王)을 뵈는 연후에 일을 보게 하여, 참으로 학교가 선무(先務)가 되는 것을 알게 하게” 했다. 즉, 조선왕조시대 공자묘 방문은 국가 의례의 근본적 절차였음을 알 수 있다.

56) 태조 1권, 1년(1392. 8. 11).

57) 1511년 4월, 중종 6년에 재건축된 공자묘 내 비각은 중국의 예를 따라 세워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중종 실록』 13권, 6년(1511. 4. 18).

선왕조말기의 고종 역시 “성인을 존중하고 유학(儒學)을 숭상하는 것은 바로 우리 왕조의 가법”⁵⁸⁾이라고 선언한 사실들을 상기할 때, 공자묘를 ‘외래문화’로 인식한 조선 사회의 변화는 전근대적 사회질서 변화의 급격함을 드러냄과 동시에 총독부의 공자묘 ‘대중화’가 지닌 양면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사실들을 검토하면서 식민지기의 공자묘를 둘러싼 조선 사회 내 ‘충돌’을 확인했다. 그 ‘충돌’은 때로는 ‘지배자 일본과 피지배자 조선’의 틀을 넘어, 조선인 간에서도 일어났다. 특히 유림에게 있어서 공자묘는 ‘신성한 제사의 장’이었지만, 근대 교육제도에 의해 양성된 지식인들에게 ‘부패한 노릇의 장’, 나아가 ‘외래문화’로 인식됐고, ‘배제의 대상’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인식의 ‘차’는 총독부에 의해 비록 공자묘가 ‘대중화’됐다고 하지만, ‘대중화’된 공자묘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공자묘를 ‘외래문화’로 배격하는 양면성을 드러냈다. 공자묘가 ‘한국의 정신을 대표하는 유교 문화’⁵⁹⁾란 타이틀을 거머쥐기까지는 식민지기를 통한 수 없는 인식의 충돌과 진통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다.

5. 맺음말을 대신하여

이상으로 일제시기 공자묘의 ‘대중화’ 과정을 알아보고, 조선 사회 내 공자묘 인식의 변화를 살펴봤다.

1911년 6월, 총독부는 조선왕조시대의 공자묘를 개편하고 공자제사인 석전 의례 시 이를 개방해 일반 대중들의 출입을 허가했다. 종래 국왕과 지역 수장에 의해 진행돼 온 의례는 대중들의 인기를 끌었고, 총독부는 공자묘에 많은 인파가 몰린 것에 대해 ‘유교의 보급’을 이뤘다고 선전했다.

58) 『고종실록』 30권(1893. 8. 7).

59) 『韓國人(한국인)의 정신 연구·계승의 현장을 찾아 (4) 成均館(성균관) <上(상)>』, 『매일경제신문』(1991. 1. 27).

그러나 실제 총독부의 판단과는 달리, 형식적으로 ‘대중화’된 공자묘가 ‘유교의 보급’을 이루진 못했다. 대중들은 공자묘에 대해 ‘유교 문화’로서의 수용이 아닌, 자신들의 처지와 상황, 그리고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해하고, 활용했다.

식민지기 공자묘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는 전근대시기부터 공자묘를 출입한 양반·유림들과의 갈등을 초래했다. 특히 근대국민국가나 민족에 대한 관심의 고조는 공자묘를 ‘외래문화’로 치부해, ‘조선 문화’와 대치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배제했으며 이러한 갈등은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계속됐다.

해방 직후 공자묘는 유림들에 의해 ‘조선 문화 창조의 장소’로 변모한다. 1945년 11월 30일, 공자묘에서는 ‘신 국가 건설’과 ‘세계 평화’, 그리고 ‘조선 문화 추진’이란 슬로건 아래 유림대회가 열렸고,⁶⁰⁾ ‘성균관대학’의 설립이 결의됐으며, 이 사업의 고문으로 이승만과 김구가 추대됐다.

이후 공자묘는 식민지기에 총독부가 시행한 공자묘 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각종 ‘충효교실’, ‘예절교실’ 등의 세미나를 열어 대중들을 포섭해 갔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시기 공자묘가 ‘조선 문화’임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선전한 결과, 대한민국 성립 이후가 되면 공자묘는 스스로 ‘중국적인 것’을 제거하는 처지에 이른다. 그것은 이 시기 등장한 ‘민족문화 양양’이란 틀에 공자묘의 정체성이 문제화되었기 때문이다.

1949년 6월 10일자 『자유신문』의 기사에는 공자묘가 ‘한국의 문화’가 아닌, ‘중국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동년 동월, 4일부터 3일 간 서울의 공자묘에서는 ‘전국유림대회’⁶¹⁾가 열렸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유림들은 ‘문묘 석전의 폐지’와 ‘제사 대상의 변경’의 결정을 내린다. 문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석전을 폐지하고, 중국 성현 113위 등 제사의 대상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민족정기를 양양하기 위해서’라고 표명했다.

이것은 공자묘가 중국에서 출발한 태생적 한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신생

60) 『매일신보』 (1945. 11. 1).

61) 유림계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마다 열린 이 대회는 이름 그대로 전국 유림들의 모임으로, 조선왕조시대는 물론 식민지 시기에도 등장한 바 있다.

국가인 대한민국의 건국과 더불어 주목된 ‘국민 만들기’ 정서와의 충돌을 회피한 결과로 볼 수 있다.⁶²⁾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9월 28일, 건국과 동시에 단군을 시조로 한 국민통합의 일환으로 ‘단군기원’을 사용했고, 국민들에게 ‘민족의 위대함’을 나타내려 노력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중국에서 온 공자묘의 가치를 크게 위축시켰고, 유림들은 그에 따른 발 빠른 조치로 문묘석전의 배향 인물 중 중국의 113명의 성현들을 제사에서 제외시켜 최소한의 인원, 즉 공자와 4명의 제자, 그리고 한반도 출신 유자들의 배향으로 변경시킨 것이다. ‘민족정기를 양양하기 위해’ 석전의 폐지와 제사 대상의 변경 조치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한국의 공자묘는 이제 ‘한국 정신을 대표하는 유교 문화의 전통’으로 한국 사회에서 시민권을 얻고 있다. 공자묘의 대표 행사인 석전예례의 춤, 즉, 고무(古舞)와 팔일무(八佾舞)는 예술적 가치가 클 뿐 아니라, 세계에서 유일하게 의례 원형이 남아있는 것으로 유명해, 근래 이것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까지 진행된 상태이다. 얼마 전 『유교신문』에는 ‘한국의 석전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이러한 자산을 보존하고 알리는 것이 ‘유림의 책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⁶³⁾ 해방 후 공자묘가 추진한 ‘유교보급’과 ‘민족정신의 양양’이란 두 가지 목적을 실현한 셈이다.

공자묘가 이러한 시민권을 얻기까지 수많은 이름의 ‘대중화’를 시도해 왔고, 그 자세한 과정과 절차는 앞으로의 연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전근대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이행기에 공자묘와 같은 ‘전통 문화’의 변용이 식민지 지배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동아시아 사회 속에 공통적 경험과 ‘지역’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식민지기의 역사상을 보다 다각적으로 그려가고 싶다.

62) 대한민국정부는 건국과 더불어 단군을 시조로 한 국민통합의 일환으로 단군기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63) 「(사설)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석전」, 『유교신문』 (2010. 5. 17).

* 본고의 인용문 중,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의미전달을 위해 약간의 현대어 수정을 가미했다. 또한 표기상 현대어로 표기된 부분도 있다.

참고문헌

『관보』
『태조실록』
『태종실록』
『고종실록』
『매일신보』
『매일경제신문』
『동아일보』
『S씨의 일기』
『경학원잡지』
『태평천하』
『삼천리』
『동광』

졸고(2010), 「19c말~20c초 일본제국주의의 유교 이용과 조선 지배」, 『동양사학연구』 제111집.

졸고(2007), 「전시체제의 유림정책」, 『역사와 현실』 63호.

정육재(2007), 「1910~1920년대 경학원의 인적 구성과 역할-사성과 강사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106호.

박영미(2005), 『일제강점초기 한학 지식인의 문명관과 대일외식-친일적 경향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졸고(2005), 「식민지권력에의 <협력>과 좌절」, 『한국문화』 36집.

이명화(1993), 「조선총독부의 유교정책(1910~1920년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집.

128 인문논총 제64집 (2010)

원고 접수일 : 2010년 10월 19일

심사 완료일 : 2010년 11월 7일

게재 확정일 : 2010년 11월 15일

要約

日帝時代における孔子廟の「大衆化」と孔子廟認識の変化 - 総督府の孔子廟開放政策を中心に -

柳美那

本稿は、日本帝国主義の植民地政策が前近代時期の文化様式を変形させ、変容した事例を朝鮮の孔子廟をとおして分析したものである。

1911年6月、朝鮮総督府は朝鮮王朝時代の孔子廟を開放し、一般大衆の「公共の場」として用いた。孔子廟は、朝鮮王朝時代において支配集団であった両班・儒林らの専有物であったが、植民地期になってから総督府によって「大衆化」され、支配政策の宣伝の場所へと変わっていく。総督府はこの政策を「儒教の普及」と「身分差別撤廃の象徴」として宣伝し、孔子廟運営に恩赦金を出した明治天皇をたたえた。

ところで、実際こうして「大衆化」された植民地期朝鮮の孔子廟は一般大衆のよい「見物」になっていく。また、両班・儒林以外の集団でも孔子廟を利用するケースが登場した。しかし、こうした動きは孔子廟に対する大衆の認識を変えた分、孔子廟を前近代の秩序から維持しようとしていた集団との葛藤をもたらした。総督府は孔子廟を開放し、儒教の普及を完成したと宣伝したが、実際、朝鮮社会においては孔子廟を「外来のもの」として認識したことも多かった。また、総督府は直接管掌した孔子廟のみ運営を許可していて、個人的な孔子廟の建立や運営は徹底的に防いだ。結局、総督府の孔子廟開放とは画一的な孔子廟イメージを強いるものに過ぎなかった。

戦後、孔子廟は総督府の大衆化政策を真似をし、大衆を包摂していく。今や韓国社会において「韓国精神を代表する儒教文化の伝統」として市民権を得た。

植民地支配を経験した東アジアにおいてこうした孔子廟の事例を探すのはそれほど難しくないであろう。筆者は今後もこうした事例を検討し、植民地経験を多核的な視点から取り上げたい。